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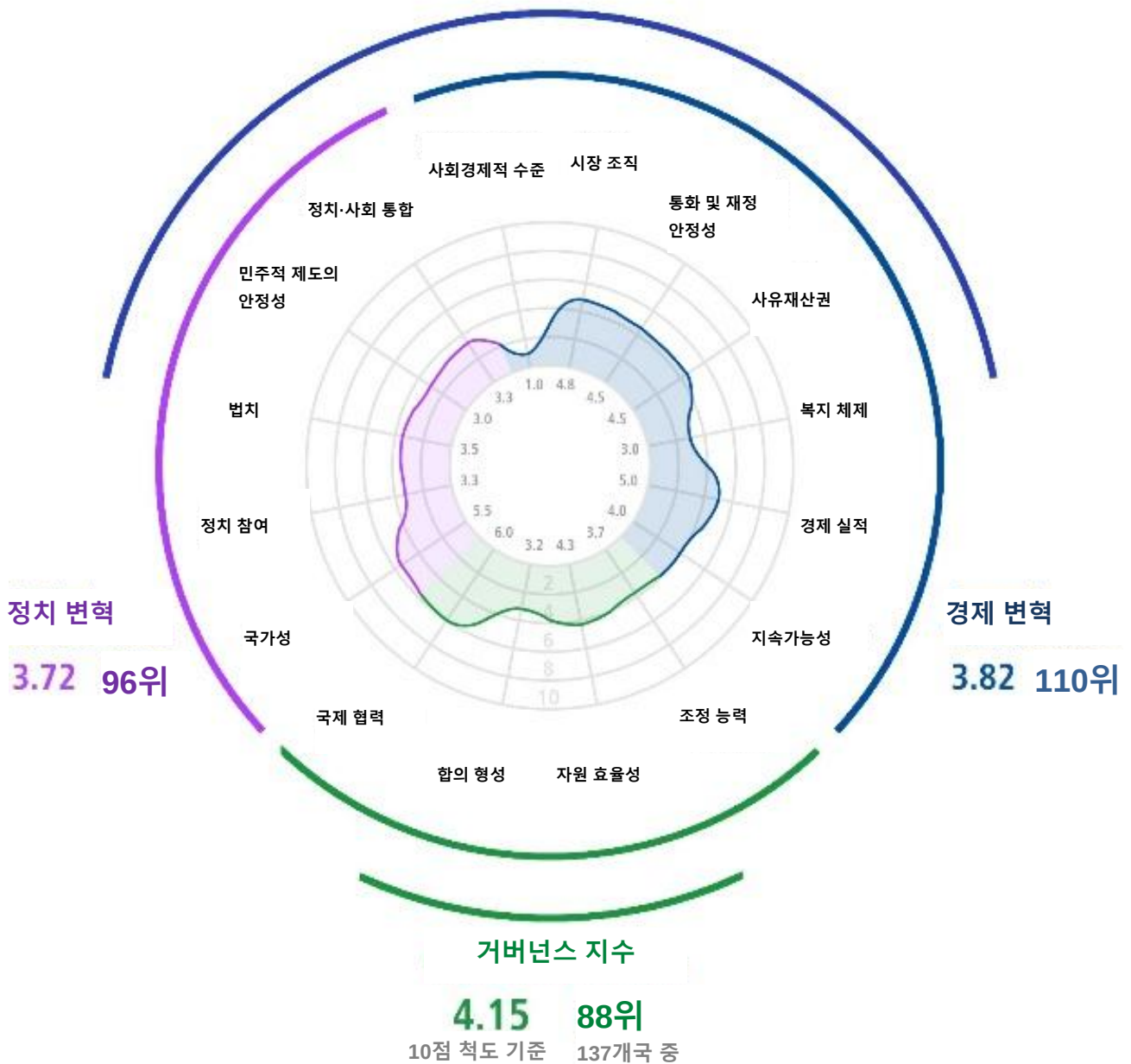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지위 지수

3.77 110위

10점 척도 기준 137개국 중



본 보고서는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의 2024년 변혁 지수(Transformation Index, BTI) 보고서의 일부이다. 본 보고서는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변혁 지수(BTI)는 137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수준과 국정 운영 역량을 평가한다. 변혁 지수(BT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bti-projec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보고서 인용 시 출처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베텔스만 재단, BTI 2024 국가보고서— Ethiopia. Gütersloh: 베텔스만 재단, 2024.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베텔스만 재단
Carl-Bertelsmann-Strasse 256
33111 Gütersloh
Germany

Sabine Donner

전화
+49 5241 81 81501
sabine.donner@bertelsmann-stiftung.de

Hauke Hartmann

전화
+49 5241 81 81389
hauke.hartmann@bertelsmann-stiftung.de

Sabine Steinkamp

전화
+49 5241 81 81507
sabine.steinkamp@bertelsmann-stiftung.de

주요 지표

인구	M	123.4	HDI	0.498	1인당 GDP, PPP	\$	2812
인구 증가율 ¹	연간 %	2.5	189개국 중 인구개발지수(HDI) 순위	175	지니 지수		35
기대수명	년	65	유엔 교육 지수	0.375	빈곤율 ³	%	65
도시 인구	%	22.7	성 불평등 지수 ²	0.52	1인당 원조액	\$	33.1

출처 (2023년 12월 기준):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각주: (1) 연평균 성장률. (2) 성 불평등 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3) 2017년 국제 가격 기준 하루 3.6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

개요

지난 2년간(2021~2023년) 에티오피아는 내전에 휩싸였고, 그 결과 2018년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가 시작한 과감한 정치·경제 개혁의 성과가 무너졌다. 암하라(Amhara), 아파르(Afar), 티그라이(Tigray) 등의 주를 포함한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서는 연방정부 및 암하라주 동맹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igray People's Liberation Front, TPLF)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분쟁으로 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동시에 오로모 해방군(Oromo Liberation Army, OLA)이 주도하는 반란이 오로미아(Oromia)주 서부와 남부에서 세력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민족 간 분쟁이 발생하여 연방정부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다.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연방정부 간의 무력 충돌은 2022년 11월 평화협정 서명 시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협정으로 파괴적인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티그라이주의 험난한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다. 한편 오로미아 지역의 반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행위자들이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전반적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2021년 9월 30일 2차 투표를 실시하며 비교적 평화롭게 총선을 치렀다. 집권 여당인 번영당(Prosperity Party)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에티오피아의 정치·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도적인 지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9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연방정부에 맞서 티그라이주에서 실시한 선거는 무효화되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티그라이주의 후속 선거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전국의 취약 계층은 경제 위축과 연료, 식량, 비료 등 필수품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의 발전이 퇴보했으며,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에티오피아 국민의 구매력이 감소했다. 티그라이 분쟁 관련 우려로 에티오피아의 채무 구조 개편과 차관 협정 체결이 지연되었다. 또한 분쟁으로 인해 피해 지역 내 수백만 학생의 교육이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는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2022년 10월 사파리콤 에티오피아(Safaricom Ethiopia)가 전국 단위의 종합 통신 서비스 면허를 취득하여 국영 기업인 에티오텔레콤(Ethio-Telecom)의 첫 번째 경쟁사가 되었다. 또한 에너지 생산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는데, 에티오피아의 대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GERD)이 2022년 2월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변혁의 역사와 특징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궤적에는 하일레 셀라시에(Haile Selassie) 황제의 통치(1930~1973년)와 그 뒤를 이은 데르그(Derg) 독재 정권, 즉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Mengistu Haile Mariam) 장교가 이끈 사회주의 군사 정권(1973~1991년)이 포함된다. 2018년 에티오피아는 현 총리가 당시 집권 연합정당인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의 지명을 받아 취임하면서 가장 최근의 민주화 과정을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민족민주운동(Amhara National Democratic Movement, ANDM, 2018년 암하라민주당(Amhara Democratic Party, ADP)으로 개명), 오로모인민민주기구(Oromo Peoples' Democratic Organization, OPDO, 2018년 오로모민주당(Oromo Democratic Party, ODP)으로 개명), 남부에티오피아인민민주운동(Southern Ethiopian People's Democratic Movement, SEPDM) 등 총 4개의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합정당은 2019년 12월 1일 변영당으로 대체되었으며, 창당 멤버에는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소속 정당 3개인 암하라민주당(ADP), 오로모민주당(ODP), 남부에티오피아인민민주운동(SEPDM)과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다른 자매 정당 5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의 창설당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변영당 합류를 거부했다.

아비 총리는 2018년 취임 시 암하라어로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의 '메데메르(Medemer)'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아비요타위 민주주의(Abyotawi democracy)'로 알려진 혁명적 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했던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정부의 통치 방식으로부터 탈피했음을 의미했다. 아비요타위 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대중을 혁명과 민주적 과정으로 이끄는 엘리트 지도력을 강조한다. 반면 메데메르 개념은 에티오피아의 문화, 의식,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범에티오피아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메데메르는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유산을 토대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노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데메르는 국가 통합, 시민 존엄성, 변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적 분열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아비 주도 정부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2020년 11월 3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주도하는 지역 민병대와 티그라이주 특수부대가 티그라이주에 주둔한 에티오피아 국방군(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 ENDF) 북부사령부를 공격하면서 폭력 사태로 확대되었다.

티그라이방위군(Tigray Defense Force, TDF)으로 알려진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군과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이 인접한 아파르 및 암하라주로 2021년 7월까지 확산되었다. 양측은 2022년 11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Pretoria)에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이 주도한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을 통한 지속적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분쟁은 북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로미아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

베텔스만 변혁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BTI)는 텍스트 분석과 수치 평가를 종합해 산출한다. 각 질문에 대한 점수는 각 제목 아래에 표시된다. 척도는 1점(최저)에서 10점(최고)까지이다.

변혁 현황

I. 정치 변혁

1 | 국가성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은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과거 일부 지역에서 반대 세력과 반란으로 인해 도전 받아 왔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오로모 해방군(OLA), 파노(Fano)로도 알려진 암하라 민족 민병대 등 세 집단이 정부의 무력 사용 독점권에 도전했다.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이끄는 티그라이방위군(TDF)은 암하라주의 북곤다르(North Gondar), 북웰로(North Wello), 와그함라(Wag Hamra), 북셰와(North Shewa), 남웰로(South Wello) 구역 일부와 아파르주의 킬베티라수-제2구역(Kilbeti Rasu-Zone 2) 및 판티라수-제4구역(Fanti Rasu-Zone 4)을 장악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말까지 이들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으며,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그 산하 군대는 티그라이주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24일 티그라이방위군(TDF)과 정부군 간에 새로운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2022년 10월 말까지 정부는 악숨(Aksum), 시레(Shire), 체르체르(Chercher), 알라마타(Alamata)를 포함한 티그라이의 주요 도시들을 탈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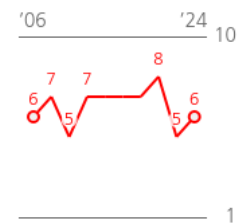
에리트레아 국방군(Eritrean Defence Force, EDF)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를 지원하여 북부 에티오피아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2020년 11월 14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군은 에리트레아가 티그라이주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비난하며 에리트레아 수도 아스마라(Asmara)에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 에리트레아 국방군(EDF)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군이 교전하기 시작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상당 기간 동안 에리트레아 국방군(EDF)의 개입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자 에리트레아군의 철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레아 국방군(EDF)은 북부 에티오피아 분쟁의 당사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2023년 보고에 따르면 1월 18일부터 에리트레아 국방군(EDF)이 티그라이주의 아드와(Adwa), 악숨, 시레 지역과 펠라필(Felafil) 및 엔데바게리마(Endebagerima)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에리트레아 국방군(EDF)이 해당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다.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 아프리카연합 감시·검증·준수 임무단(AU Monitoring, Verification and Compliance Mission, AU-MVCM)은 에리트레아 국방군(EDF)의 철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프리카연합(AU)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을 통한

질문 점수

무력 사용 독점권

6



지속적 평화 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아프리카연합 감시·검증·준수 임무단(AU-MVCM)을 설립했다.

오로미아주에서는 오로모 해방군(OLA)이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 집단은 오로미아의 켈렘웰레가(Kellem Wollega), 호로구두루웰레가(Horo Guduru Wollega), 동웰레가(East Wollega), 서웰레가(West Wollega), 서셰와(West Shewa), 동셰와(East Shewa), 북셰와, 동구지(East Guji), 구지(Guji)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로모 해방군(OLA)은 해당 지역 내 일부 농촌 지역을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2022년 8월 8일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로모 해방군(OLA)은 오로미아주 내 1,739개 케벨레(에티오피아의 최하위 행정단위)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점령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9월 이후 오로모 해방군(OLA)은 오로미아주 전역에서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동 웰레가 구역 내 21개 워레다(우리나라 구/군 단위 행정구역) 중 11개를 장악했으며, 서 웰레가 김비(Gimbi) 워레다의 케벨레 대부분을 포함한 광범위한 농촌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했다.

주로 암하라주에서 활동하는 파노 구성원들도 에티오피아 내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 집단은 2021년 티그라이방위군(Tigray Defence Forces, TDF)을 암하라주에서 몰아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2022년 5월, 암하라 주 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법률 준수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 작전은 해당 지역에서 밀수 사건, 총격 사건, 법원 판결 개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했다. 그 결과, 파노 민병대와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언론인, 파노 민병대 지도자, 암하라주 특수부대 전 지휘관을 포함하여 4,5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정부군이 작전을 시작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도 발생했다. 또한 2022년 11월 이후, 현지에서도 파노로 불리는 서부 오로미아 거주 암하라 민족 민병대가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무력 사용 독점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오로모족과 주 정부 당국은 이 민병대가 인접한 암하라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암하라 당국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민병대가 2018년 이후 암하라주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오로모 해방군(OLA) 공격으로부터 동료 주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현지에서 조직되었다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는 민족 연방주의라고 알려진 통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는 민족 기반의 행정 단위인 연방, 주, 구역, 워레다(woreda: 우리나라 구/군 단위 행정구역), 케벨레(kebele: 에티오피아 최하위 행정구역)로 나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2개의 연방주와 11개의 지역주가 있었다. 연방주와 일부 지역주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다른 주(예: 아파르, 암하라, 하라리(Harari), 오로미아, 시다마(Sidama), 소말리(Somali), 티그라이)는 하나의 민족 집단이 지배적이다.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DRE) 헌법은 각 민족 집단('민족', '국적', '인민'으로 지칭됨)에 분리독립을 포함한 자결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정치 영역은 민족 정체성에 기반하는데, 그에 따라 시민권의 개념 또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일부 민족주의자들, 특히 오로미아, 티그라이, 소말리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은 국적(에티오피아인)보다

국가 정체성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우선시한다. 에티오피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나, 법적으로는 모든 민족에 완전한 시민권이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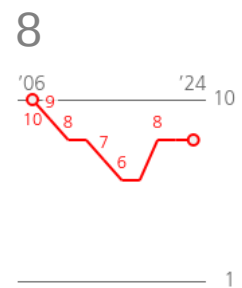
북부 에티오피아 분쟁 기간 동안, 분쟁에 관여한 여러 당사자들은 지지를 확보하고 전투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티그라이와 티그라이 민족('테가루스(Tegarus)')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티그라이 승리'라는 구호를 사용하여 지지를 유도했다. 반면, 연방정부와 암하라 주 정부는 전쟁이 에티오피아 국가로서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 존립을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에티오피아 정부 지지자들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승리'라는 구호를 사용했다. 오로모 해방군(OLA)을 포함한 에티오피아 내 다른 반란 집단들도 유사한 정체성 기반 지지 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에티오피아에서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은 정교회 기독교인이며, 무슬림이 두 번째로 큰 종교 집단이다.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DRE) 헌법에 따르면,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며, 국교는 없고, 국가는 종교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종교는 국정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적 명령(예: 낙태 및 성적 지향에 관한 것)과 정치 제도가 종교적 교리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종교 집단은 정부가 토지를 다른 정부 사업이나 종교 단체에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결정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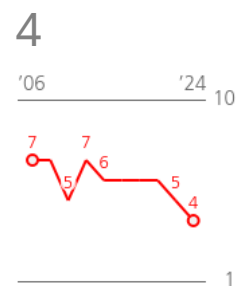
2021년과 2022년에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티그라이주, 아파르주 서부, 암하라주 북부와 동부, 오로미아 서부였다. 그 결과, 반란 집단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행정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행정관과 공무원이 이 지역을 떠났고, 각종 기관 및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그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연방정부는 티그라이주에 기본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암하라주의 와그 하메라(Wag Hamera), 북웰로, 남웰로 구역 대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로모 해방군(OLA)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오로미아주, 특히 서부 오로미아에서도 기본적인 행정 체계가 붕괴되었다. 이는 정부가 이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법률을 집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기본 서비스(예: 교육, 의료, 전기, 통신)가 제한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물, 전기, 의료, 교육, 통신, 도로 접근성이 부족하다.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가구의 65%가 개선된 수원에 접근할 수 있고, 6.3%의 가구가 개선된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도시 인구의 93.2%와 농촌 인구의 39.4%에게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추정하지만,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전기와 물에 대한 공급이 제한적이다.

종교 교리의 불간섭



기본 행정



에티오피아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중단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15일, 남부민족인민지역주(SNNPR) 구라게(Gurage) 구역 웰키테(Welkite) 시의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도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공급 중단 때문에 수도위생사무소 앞에 모여 식수 부족에 항의했다. 시위대는 도로를 막고 수도위생사무소 건물에 돌을 던졌다. 그리고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지역 특수부대가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여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2 | 정치 참여

에티오피아 총선은 두 단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차 투표는 2021년 6월 21일에, 2차 투표는 2021년 9월 30일에 진행되었다. 2020년 9월 9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연방정부에 맞서 티그라이주에서 실시한 선거는 무효로 선언되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티그라이에서의 후속 선거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 4일, 선출 및 임명된 신정부 구성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선거에는 다수의 야당 후보들과 125명의 무소속 후보가 참여했다. 오로모 해방전선(Oromo Liberation Front, OLF), 오로모 연방회의(Oromo Federalist Congress, OFC), 오가덴 민족해방전선(Ogaden National Liberation Front, ONLF)을 포함한 일부 야당은 선거를 보이콧했다. 아비 아흐메드가 이끄는 번영당이 인민대표원(House of Peoples' Representatives) 436석 중 410석을 차지했다. 야당 중에서는 암하라민족운동(National Movement of Amhara, NaMA)이 5석, 에티오피아사회정의시민당(Ethiopian Citizens for Social Justice, EZEMA)이 4석, 게디오인민민주조직(Gedio People Democratic Organization)이 2석을 차지했다. 무소속 후보들이 4석을 확보했다.

2021년 10월 5일,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22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하고 여러 야당 인사를 장관직에 임명했다. 아비 총리는 이러한 임명이 민족 기반 할당제가 아닌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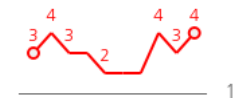
선거는 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선제적 보안 전술과 진압을 통해 폭력 사태 발생을 막았다.

주요 야당 인사들의 체포, 티그라이주의 배제, 분쟁으로 인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의 투표 취소 등 근본적으로 주요 정치 집단이 배제된 채 선거가 치러졌다. 에티오피아국가선거위원회(National Election Board of Ethiopia, NEBE)가 정부와 성공적으로 협력하여 여러 선거 부정을 해결했지만, 개인과 정당이 제기한 민원이 방대하여 위원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부 민원은 선거 절차(예: 투표 및 등록 부정)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민원은 선거 전 불공정한 언론 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4

'06 '24 10



농촌 지역 전반, 특히 오로미아주의 농촌 지역이 선거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괴롭힘에 직면한 장소로 확인되었다. 오로모 해방전선(OLF)과 오로모 해방회의(Oromo Liberation Congress, OLC)는 집권당의 괴롭힘과 지도자들 투옥을 이유로 투표 시작 전에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에티오피아사회정의시민당(EZEMA) 또한 선거 준비 기간 중 비쇼프투(Bishoftu)에서 발생한 당 의장 피살 사건을 비롯하여, 집권당의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부재는 신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지방 당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변영당을 창당하고 이전 집권당인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을 해산했을 때, 그는 연방정부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수립한 민족 연방주의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에티오피아 헌법에 공식화되어 있는 민족 정치의 영향에서 자신의 행정부를 분리하지 못했다. 에티오피아는 민족 연방주의와 영토에 기반한 국가 구성 원칙 모두를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은 지역 내 다수 민족/토착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과 통제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다수 집단의 민족 대표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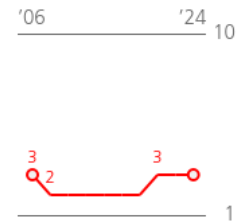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에티오피아 각 지역의 민족주의 정치 세력 내에 정치적 고립 지대가 존재한다. 헌법에 명시된 법률을 통해 이들은 헌법과 고조된 정치적 감정을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통치 구조에서 민족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분쟁 지역과 오로미아주에 둘러싸인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헌법 제30조는 "모든 사람은 집회의 권리와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권리 및 청원권을 가진다. 공공 안전, 공공질서 및 국민의 일반적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3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사람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불관용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3년 초 몇 달 동안 여러 야당이 연방 경찰에 의해 당 회의 개최를 저지당했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시위와 명절 행사는 정기적으로 무력 해산되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자주 발생한다. 정부가 후원하지 않는 한 집회 허가는 자주 취소되거나, 승인되더라도 나중에 경찰에 의해 해산된다.

2021년과 2022년에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광범위한 분쟁이 발생하여 정부군이 티그라이와 오로미아의 민족주의 세력과 대립했다. 많은 상황에서 그러하듯이, 이로 인해 정치적 공간이 축소되었고,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무장 반정부 단체에 대한 지지와 동일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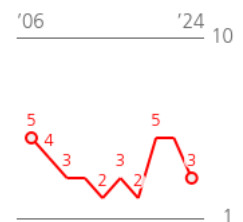
효과적인 통치 권한

3



결사/집회의 권리

3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 모두 정기적으로 체포되고, 협박을 받으며, 반정부 단체나 의제를 지지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분쟁 지역에서는 반정부 단체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압력과 전반적인 부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과 비교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개인과 시민사회 단체는 이전 정부 시절보다 현재 더 큰 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통치 구조와 인사에 대한 수많은 변화와 함께, 아비(Abiy) 총리가 집권한 이후 연방정부의 언론인과 보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 아비가 선출되었을 때, 아비는 대중 매체(방송, 출판 및 인터넷)를 위한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동안 그렇게 했다. 그러나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북부에서 재앙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언론 자유는 더욱 위축되었으며, 언론인들은 반군과 정부군 모두로부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언론 환경은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와 정보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압력이 증가한 결과물이다. 연방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압력은 북부 에티오피아 분쟁 기간에 정점에 달했으며, 이 시기에 많은 외국 언론인이 추방되고, 지역 언론사가 폐쇄되었으며, 개인들이 체포되거나 위협을 받았다. 정부는 정보와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에 자주 의존한다.

3 | 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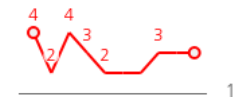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DRE) 헌법은 민족 연방주의에 기반한 이중 정부 구조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로 구성되고, 각 정부는 별도의 관할권을 가진다. 에티오피아는 연방, 주, 구역, 워레다(woreda), 케벨레(kebele)의 5단계 행정 체계로 구성된다. 케벨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단위이다. 현재는 11개 주와 2개의 특별시(아디스아바바와 디레다와(Dire Dawa))가 있다. 아디스아바바는 수도이자 연방정부 소재지이며, 11개 주는 아파르, 암하라, 벤상굴/구무즈(Benshangul/Gumuz), 감벨라(Gambella), 오로미아, 시다마, 남부민족주(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SNNPR), 소말리, 남서 에티오피아 인민주(South West Ethiopia People's Region)이다. 시다마와 남서 에티오피아 인민주가 가장 최근에 설립된 주다. 시다마주는 2020년 11월 20일 주민투표 후 2021년 2월 22일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남서 에티오피아 인민주는 2021년 9월 30일 주민투표 후 2021년 11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연방정부는 인민대표원과 연방원(House of Federation)이라는 두 개의 입법 기관,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구성된다.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DRE) 헌법 제54조는 주 정부에 사회의 필요에 맞는 주 및 행정 단계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한다.

표현의 자유

3

'06 '24 10



권력 분립

3

'06 '24 10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자율적이고 지역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를 설립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각 지역이 사회의 필요에 맞는 자체 하위 행정 단계를 설립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라리주와 시다마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가 주 의회, 구역, 워레다, 케벨레의 행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하라리와 시다마에는 구역 단위 체계가 없다.

또한 벤샹굴/구무즈, 감벨라, 하라리 및 남서 에티오피아 인민주에는 '민족 의회'라고 알려진 제2의 의회가 있다. 이 의회는 해당 지역에서 인정된 토착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주에서 주 의회, 워레다 및 케벨레의 의회 구성원은 선출된다.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헌법과 주 헌법에 따라 정부의 각 부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치안 상황 악화로 인해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 한 주정부의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권력 분립은 취약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회와 사법부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경계도 모호하다.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정부를 이끌던 시기와 비교하면 주 정부에 어느 정도 상대적인 독립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정은 현 집권당인 번영당의 행정부로부터 하달된다.

각 정부 단계(즉,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별도의 사법부로 구성된다. 연방정부에는 세 가지 사법기관인 대법원, 연방고등법원, 1심법원이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주에는 자체 주 대법원, 고등법원 및 1심법원이 있다. 샤리아 법원도 있다. 연방 차원에서 샤리아 법원은 연방 샤리아 1심법원, 연방 샤리아 고등법원, 연방 샤리아 대법원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샤리아 법원은 가족법과 관련된 사건만 재판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관련 사안에 대해 최고이자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지며, 주 대법원은 주 관련 사안에 대해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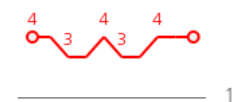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의 최고 연방 사법 권한은 연방 대법원에 귀속된다. 인민대표원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연방 대법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한다. 인민대표원은 또한 연방사법행정위원회(Federal Judicial Administration Council)가 선정하고 총리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 중 연방 판사를 선출한다. 주 의회는 주 행정수반의 추천에 따라 주 대법원장과 부원장을 임명하며, 주 사법행정위원회(State Judicial Administration Council)의 추천에 따라 주 법원의 판사를 임명한다. 사법행정위원회(Judicial Administration Commission)는 주 운영에 무슬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준공식 기관인 연방 마즐리스(majles)의 추천에 따라 샤리아 법원의 판사를 선정한다.

2018년 이후 연방 사법부는 독립성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판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은 여러 지침을 개정하고 다수의 포고령을 채택했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연방 사법부의 독립성은 정치 당국(2018년 이전보다는 덜 빈번하지만)에 의해, 그리고 부패로 인해 훼손됐다.

사법부 독립

4

'06 '24 10



정치 당국과 부패 문제는 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기관의 책임성 부족은 사법부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법원이 유사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에티오피아에서 대부분의 공직자는 집권당과 연결되어 있고, 부패는 후견주의, 도둑정치, 지대추구, 국가포획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반부패법은 원칙적으로 강력하지만 적절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2022년 11월 아비 총리는 "부패가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고 밝혔다.

에티오피아는 개혁을 진행 중이며 일부 공직자가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세워졌다. 2022년 3월 집권 번영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 직전에 당은 각 행정 단계에서 10만 8,258명의 공직자를 평가했다. 평가 후 당은 1만 658명의 공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했으며, 대부분 해임 또는 보직 변경이었다. 또한 정부는 2022년 11월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부 주 정부도 연방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 몇 년간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부분의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11월 이후 정부는 직위를 남용하는 공직자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이러한 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정부에 충성하는 관리들은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전히 다양한 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기에 최근 시작된 국가 반부패 개혁을 완전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직권 남용 기소

4

'06 '24 10



1

수도에서의 시민권은 몇 년 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다. 그러나 수도 외 지역, 특히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군이 초법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오로모 해방군(OLA)을 포함한 다양한 반군 단체의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주민들의 시민권을 침해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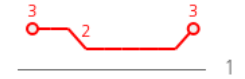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되며,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다. 때때로 보안군은 수감자 석방에 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나 정부 관리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개인이 보안군에게 체포되어 며칠 동안 행방불명 되었던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시민권이 법으로 성문화되어 있고 법원의 독립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판 과정의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거의 요청하지 않는다.

시민권

3

'06 '24 10



4 | 민주적 제도의 안정성

에티오피아의 현 정권은 거버넌스 전문가들에 의해 '경쟁적 전제주의'로 묘사되어 왔으며, 이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주도의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시대의 선거 권위주의에서 변화한 것을 나타낸다.

에티오피아 인민대표원 의원과 지방정부 관리들은 2021년 6월과 9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선출되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번영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배제되어 선거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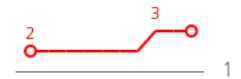
경쟁적 전제주의란 집권 정권이 정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을 허용하면서도 정치 권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상당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공식적인 민주적 제도는 정치적 권위를 획득하고 행사하는 주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지만, 민주적 제도와 민주주의 이행은 집권 정권에 의해 심하게 제한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총선의 승자로서 번영당은 에티오피아 민주적 제도의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안정적이지만, 당의 의제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시대의 선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긍정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변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법 개혁에는 판사 수 증원, 더 나은 교육과 자원 제공, 사법 행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 시행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적 혐의로 인한 장기 구금과 관련하여 경찰이 사법 판결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흔했다.

민주적 제도의 성과

3

'06 '24 10



최근 정부 개혁으로 인해 향후 민주화의 잠재력은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시대보다 현재가 더 높다. 에티오피아 국가선거위원회(NEBE)와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민주적 원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기관들이 미래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심각한 도전이 남아 있으며, 폭력적 충돌과 정치 집단의 양극화가 현재까지 이뤄낸 모든 진전을 되돌릴 위험이 되고 있다.

집권 번영당은 4개의 주요 민족 기반 정당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연합의 해체 이후 결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을 구성했던 기존 4개 정당 중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만이 번영당 합류를 거부하며 총리가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아비 아흐메드 총리, 번영당의 연방정부,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가선거위원회(NEBE) 등 번영당이 도입한 민주적 제도들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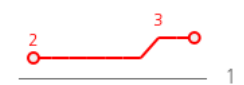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연방정부 간 무력 충돌이 발발한 후, 연방 당국은 신속하게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행정부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관리들을 해임했으며,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지도자들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새로운 지역 지도자를 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2020년 9월 연방정부에 반하여 실시한 선거를 근거로 자신들을 티그라이의 공식 집권 정당으로 간주하며, 2021년과 2022년 분쟁 기간 동안 티그라이를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5 | 정치적·사회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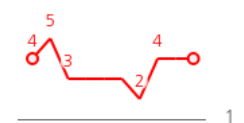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의 정당 체계는 취약하다. 국내 정치 환경은 민족성에 기반하고 있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주도의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과 그 계열 정당들이 국가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정당이었다. 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암하라민족민주운동(ANDM), 오로모인민민주기구(OPDO), 남에티오피아인민민주운동(SEPDM)의 연합이었다. 이 정당들은 특정 민족 집단과 연계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야당은 국내의 적대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국내에 기반을 둔 야당을 철저히 감시했다. 따라서 야당은 사회적 이익을 표명하고 결집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2018년 이후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서 새로운 정당이 결성되고 망명 정당이 정치 무대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했다. 정치 환경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 개방적이었다. 정당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민족 집단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들 대부분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표명하고 결집할 수 있는 안정성과 깊은 사회적 뿌리가 부족하며, 내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은 제대로 작동하는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로모 해방군(OLA)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같은 일부 정당은 정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민주적 제도에 대한
현신



정당 체계



더욱이 에티오피아의 정치 환경은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자신들의 민족 집단만을 옹호한다. 이는 득표수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며, 국가의 민족 기반 정치 체계를 반영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는 후견주의가 만연해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후견-피후견 관계는 연방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관계는 충성스러운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상을 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하나의' 집권당(변영당)과 집권 연합당(에티오피아인민혁명민주전선(EPRDF))만 존재한다. 변영당은 주 및 연방 행정 수준의 최소 13개 파벌로 나뉘어 있다(예: 오로미아 변영당(Oromia Prosperity Party), 암하라 변영당(Amhara Prosperity Party), 아디스아바바 변영당(Addis Ababa Prosperity Party) 등). 후견주의 관계는 양 행정 수준 기관들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후견 네트워크는 하위 행정 수준인 케벨레(kebele)까지 확산된다. 지역 주민들의 표심과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농업 진흥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 접근 방식은 2021년 연방 선거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유권자 변동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구성원들에게 상호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공식 지역사회 기반 조직(예: '데보(debo)', '이디르(idir)', '이큐(iqub)') 관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GO, INGO)의 수는 1973년과 1984년 에티오피아 기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증가하며 1970년 이후 증가했다. 비정부기구(NGO)와 국제 비정부기구(INGO) 모두의 수는 국내 시민사회 단체의 수를 심하게 제한했던 데르그 정권의 몰락 이후 2000년대에 증가했다. 라흐마토(Rahmato, 2002)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와 국제 비정부기구(INGO)의 수는 1970년대 약 25개에서 1994년 70개, 2000년 368개로 증가했다. 또한 다양한 집단행동 단체, 소액 금융기관, 전문가 협회가 있다. 지역사회 기반 조직은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노동과 재정 지원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유형의 시민사회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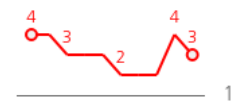
그러나 2009년 자선단체 및 사회단체 선언(Charities and Societies Proclamation)은 외국 및 국내 시민사회 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에 과도한 제한을 가했다. 이 법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2005년 연방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후 시행되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예를 들어, 여당과 야당 대표 간의 TV 토론을 조직하고 후원하며, 유권자 교육을 제공하고,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던 단체의 수는 2009년 선언에 의해 자금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아비 정부가 2019년 3월에 오랫동안 시민사회 단체(CSO)를 제한해오던 시민사회법을 대체한 이후 시민사회 단체(CSO)를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 환경이 민족성에 기반하고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CSO)가 사회와 정치 체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이는 이 단체들 대부분이 중립을 유지하고자 하며 특정 민족 집단을 옹호하는 데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

3

'06 '24 10



그러나 특정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시민사회 단체(CSO)는 사회와 정치 체제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주제별 이슈를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예: 에티오피아인권단체컨소시엄(Consortium for Ethiop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에티오피아인구보건환경컨소시엄(Population Health and Environment Ethiopia Consortium), 에티오피아기후변화컨소시엄(Consortium for Climate Change Ethiopia)).

2018년 아비 아흐메드 총리 임명 이후 정치적 공간이 개방되면서 많은 사람이 만족했다.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여 2021년 6월 선거는 선거 부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선거로 평가받았다. 에티오피아는 201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비 정부는 이 변혁기에 '메데메르(Medemer)' 개념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 개념은 에티오피아의 문화, 의식,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범에티오피아적 민주주의를 수립하고자 한다. 메데메르는 국가 통합, 시민의 명예, 번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민족성보다 국가 통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개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민족 집단은 분열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메데메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민주적 규범과 절차의 의미에 대해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에티오피아 내 다양한 민족 집단이 관련된 지속적인 무력 충돌과 양극화된 정치 환경은 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에티오피아 내에서 서로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신뢰 수준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오로미아주에서 발생한 민족 기반 폭력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암하라 민족 민간인들이 오로미아주에서 암하라주로 피난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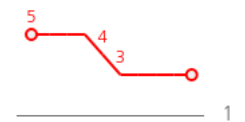
'06 '24 10

n/a 1

사회적 자본

3

'06 '24 10



II. 경제 전환

6 |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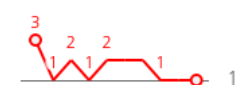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정부가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쟁, 가뭄, 곡물 및 연료 가격 급등 등 여러 충격으로 인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연간 7% 이상을 기록했던 에티오피아의 경제 성장률이 2021/22 회계연도에는 3.8%로 둔화되었다. 에티오피아 전역의 취약 계층은 경제 위축과 이에 따른 연료, 식품, 비료 가격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가 지난 10년간 이룬 진전이 약화되었다.

질문 점수

사회경제적 장벽

1

'06 '24 10



에티오피아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며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빈곤을 감소시켰다. 에티오피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에티오피아의 1인당 GDP는 약 925달러였다. 2021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점수는 0.498이었다.

분쟁과 가뭄으로 인해 그동안의 진전이 악화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취약 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락했다. 2022년에는 에티오피아 동부와 남부 지역의 재앙적인 가뭄으로 600만 명이 기아 위험에 처했다. 한편, 에티오피아 북부의 티그라이, 아파르, 암하라주에서의 분쟁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실향민이 되었다. 일부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특히 티그라이주와 암하라주의 일부 구역은 분쟁 기간 동안 은행, 통신, 전기 등 정부 서비스로부터 단절되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분쟁 당사자들에 의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히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의 법률상 성평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인 「여성, 기업 및 법률(Women, Business and the Law)」(2021)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특정 법률(노동선언 제1156/2019호 제87조)은 여성이 관할 부처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1년 에티오피아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점수는 0.520이었다.

에티오피아에서 인플레이션율은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과 외화 부족으로 인해 2022년 11월에 35.1%로 정점에 달했다.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지표		2019	2020	2021	2022
GDP	\$ M	95912.6	107657.7	111261.9	126783.5
GDP 성장률	%	8.4	6.1	5.6	5.3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	15.8	20.4	26.8	-
실업률	%	3.2	4.1	3.9	4.0
외국인 직접투자	GDP 대비 %	2.7	2.2	3.8	2.9
수출 성장률	%	-5.8	-5.4	19.0	-
수입 성장률	%	-5.3	-2.0	13.3	-
경상수지	\$ M	-5025.1	-2718.8	-4507.3	-5160.4

경제 지표		2019	2020	2021	2022
공공부채	GDP 대비 %	55.8	53.9	53.8	46.4
대외부채	\$ M	28376.7	30363.3	30017.5	-
총 부채 상환액	\$ M	2165.5	1997.4	2001.3	-
순 대출/차입	GDP 대비 %	-2.7	-1.8	-	-
세수	GDP 대비 %	6.7	6.2	-	-
정부 소비	GDP 대비 %	9.2	9.1	8.8	7.4
공공 교육 지출	GDP 대비 %	4.5	4.1	4.1	3.7
공공 보건 지출	GDP 대비 %	0.7	1.0	-	-
연구개발(R&D) 지출	GDP 대비 %	-	-	-	-
군사비 지출	GDP 대비 %	0.6	0.5	0.5	0.9

출처(2023년 12월 기준):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군사비지출데이터베이스(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7 | 시장 조직 및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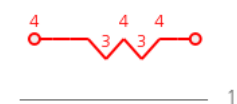
이전 연도들과 비교하여 에티오피아 시장은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여전히 시장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시장 경쟁은 취약한 제도적 틀 아래에서 운영된다. 부패와 정실주의는 수출입, 투자, 고용, 토지 취득, 건설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특혜의 문을 열어준다.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고 건전한 시장 기반 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분야에 제한을 부과하여 정상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내 시장 불안정의 원인으로 중개인과 브로커를 지목해왔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이후 아디스아바바 행정부는 아디스아바바 내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다. 한편, 2022년 9월 이후 정부는 에티오피아 내 시멘트의 유통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가격 설정을 시도했다.

가격은 주로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기본 필수품의 가격을 설정하거나 정부 소유 상점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가격을 통제하려고 한다.

시장 조직

4

'06 '24 10



에티오피아에서는 통화 태환성을 포함한 노동력과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외화 부족으로 인해 현지 통화인 비르(birr)를 다른 외화로 환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정부는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우산과 같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수입업자들은 식용유와 같은 기본 필수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국립은행으로부터 외화 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달러 대비 비르의 암시장 환율이 상승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양한 관료적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의 대부분이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뇌물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14년 무역경쟁 및 소비자보호 선언 제813/2013호는 상업 활동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으로부터 기업 공동체 보호 등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경쟁적 합의, 경쟁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합병, 불공정 경쟁 행위를 반경쟁적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불량품 교환권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경쟁 및 소비자보호청(Trade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은 이 선언의 이행을 담당한다. 청 산하에는 사업자, 소비자, 행정청 및 법령 위반 혐의자 등이 연루된 분쟁 전반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한 심판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법 기구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발령, 과태료 부과, 반경쟁 행위 피해자 및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 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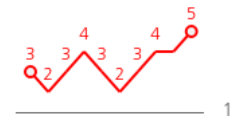
에티오피아는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와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의 회원국이다. 경제 통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COMESA는 경쟁법 체제를 채택하여 반경쟁적 사업 실태를 해결하고 기업 합병을 통제하기 위해 말라위(Malawi)에 공동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를 설립했다.

법적 경쟁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는 강력한 반경쟁적 관행이 존재한다. 정부는 시장 불규칙성의 원인으로 중개인과 브로커를 지목했다.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분권화 부족으로 인해 반경쟁적 무역법을 집행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 또한, 법 집행 당국에는 민간 부문이나 소비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쟁 정책

5

'06 '24 10



2018년 총리는 대외 경제 개방을 천명했다. 일부 개혁안이 이행되고 있으나 대외 무역의 완전 자유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장의 특정 분야에는 여전히 관세 장벽과 접근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합계의 비율을 측정한 에티오피아의 GDP 대비 무역 비율은 2021년에 24.3%였다. 에티오피아는 주로 커피와 유지종자를 수출하고 정제 석유, 밀, 의약품을 수입한다.

에티오피아는 정부간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와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의 회원국이다. 2019년 3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고 비준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과 관세 면제를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설립했다. 2022년 8월, 에티오피아는 디레다와에 첫 번째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무역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더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물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s)는 에티오피아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할 계획을 제안했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에티오피아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기 위해 제11차 임시회의에서 최초의 국가 경제특구 정책을 비준했다. 2022년 말,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자유무역지대 인센티브 규정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정부의 10개년 개발 계획에 명시된 계획 중 하나이다.

2003년 3월부터 에티오피아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정부는 원자재와 반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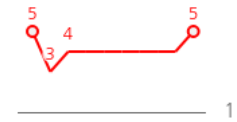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에는 민간 은행과 국영 은행이 모두 있다. 정부 소유의 에티오피아국립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은 이 모든 은행을 통제하고 에티오피아의 은행 시스템을 감독한다.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법정 통화를 인쇄하고 발행하며, 에티오피아의 통화 공급을 규제하고, 이자율과 기타 자금 비용을 규제하며, 에티오피아의 환율 정책을 수립하고,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의 운영을 허가, 감독 및 규제한다. 최근까지 외국인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각료회의는 은행 부문을 개방하는 정책을 비준했다. 2022년 11월, 정부는 외국 은행이 에티오피아 상업은행의 최대 3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이 국내 및 외국 은행 모두에서 5%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자본 동원, 금융 혁신 촉진 및 투자 위험 분담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선언 제1248/2021호(Capital Markets Proclamation No. 1248/2021)를 발표했다.

대외 무역 자유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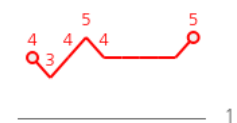
'06 '24 10



은행 시스템

5

'06 '24 10



이 선언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자본시장청(Ethiopian Capital Market Authority)이 설립되었고, 이는 자본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선언의 실행을 이끌기 위해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자본시장프로젝트실행팀(Capital Market Project Implementation Team, CMPIT)을 설립했다. 2022년 말까지 CMPIT는 자본시장 운영을 위한 여러 중요한 규약과 기타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자본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최근에서야 구축했다.

2022년 12월 기준, 에티오피아에서는 30개의 은행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 산업은 정부 소유인 에티오피아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Ethiopia, CBE)과 에티오피아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Ethiopia)이 지배하고 있다. 상업은행은 최소 20억 비르(ETB)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인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이 2021년 4월에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상업은행들은 4년 이내(2026년 6월까지)에 납입자본금을 50억 비르로 늘려야 한다.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은행을 위한 은행위험관리지침(Bank Risk Management Guidelines)을 수립했다. 각 은행의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들은 자체 내부 감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의 감독도 받는다. 대부분의 은행이 매년 수익을 공개하지만, 많은 은행이 경제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은행들은 바젤협약(Basel Accords)이 정한 대부분의 국제 은행 시스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에티오피아의 은행 자산 대비 자본 비율은 7.1%였다. 이는 7.2%였던 202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반대로, 은행 총 대출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3.4%에서 2021년 5.4%로 증가했다.

8 | 통화 및 재정 안정성

트레이딩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2022년 에티오피아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와 수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12월에 33.8%에 달했으며, 이는 전월에 기록된 6개월 최고치인 35.1%에서 다소 완화된 수치이다. 에티오피아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20년간 매우 불안정하여 매년 10%에서 20% 사이를 오갔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는 외환시장의 왜곡 해소, 외환 공급 완화, 정부 보유 외환보유고 재건, 공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2017년 10.7%에서 2019년 15.8%, 2021년 26.78%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 인플레이션의 원인에는 외부 충격과 내부 충격이 모두 포함된다. 농업 경제국인 에티오피아는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 및 연료 가격 상승에 특히 취약했다. 한편, 내부 요인으로는 에티오피아 남부의 극심한 가뭄과 아파르, 암하라, 티그라이, 오로미아주의 분쟁이 있다.

통화 안정성



2021년 G20 공동 프레임워크(Group of 20's Common Framework) 절차에 따른 에티오피아의 채무재조정 요청은 지속적인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는 비르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9월, S&P 글로벌(S&P Global)은 정치적 불안정과 채무 재조정 지연을 이유로 에티오피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 유치와 외환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2022년 8월 외국 금융기관에 은행 산업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중앙은행이자 주요 통화 당국 역할을 한다. 에티오피아국립은행 총재는 의회의 인준 없이 총리가 임명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국립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볼 수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에티오피아의 실질 실효환율은 2019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9년 최고치인 154.8에서 2020년 151.3, 2021년 140.8로 떨어졌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분쟁과 거시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재정적자는 2023 회계연도에 3,080억 비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에 대응하여, 정부는 연료 및 밀 보조금 삭감과 기타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개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산세 징수 등 세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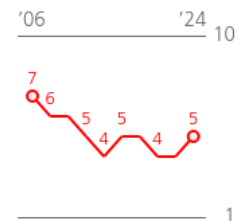
피치(Fitch)는 에티오피아가 2023년 6월로 끝나는 회계연도(FY23)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달러, 2024 회계연도(FY24)에 14억 달러의 대외 채무 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에티오피아의 일반정부 총부채가 GDP의 46%라고 보고했다. 연방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간의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공공부채는 향후 몇 년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문제로 인해 2017년부터 외화 부족에 직면해 왔다. 이로 인해 비르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증대, 수입 억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2022년 에티오피아의 수출은 커피와 금 가격 급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21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2020/2021년 142억 달러에서 2021/2022년 181억 달러로 증가했다. 에티오피아의 수입품(연료, 곡물, 비료) 가격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2021년과 2022년에 크게 상승하여 에티오피아의 무역적자를 41억 달러로 증가시켰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정부의 농업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2022년 처음으로 밀 수출국이 되었다.

재정 안정성

5



통화 안정과 더 큰 경제 성장이 빈곤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분쟁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정적인 추세는 최소한 몇 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11월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간의 평화협정 체결 성공은 연방정부의 분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더 큰 통화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9 | 사유재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FDRE) 헌법은 재산을 취득·사용·처분할 권리를 포함하여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유재산은 '개인'과 '법인', 또는 '법에 따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노동, 창의성, 기업 활동 또는 자본을 통해 만들어낸 가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산출물을 의미한다. 토지는 정부 재산으로 정의되며, 에티오피아 민족, 국민 및 인민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토지 위에 건설한 것만 소유한다. 이는 다양한 정치 기관 간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는 부패와 얽혀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토지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 토지행정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다. 대규모 상업 농장 건설이나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토지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했다는 보고가 다수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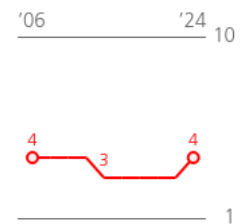
정부는 토지 관련 절차를 개혁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토지 행정에 관한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부패를 해결하고 토지 관련 사안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년간 부동산 양도 행위를 여러 차례 중단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토지행정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아디스아바바 경찰은 레미쿠라(Lemi Kura) 하위 행정구 공무원 37명이 정부 토지 탈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행정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약 12명의 공무원만 체포할 수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수배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아디스아바바 행정부는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도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

재산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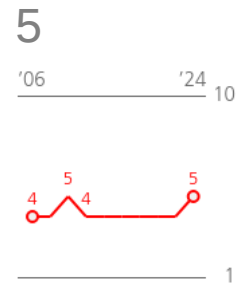


지난 수십 년간 에티오피아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농업에서 산업 경제 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강조는 제1차 성장변혁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 GTP I)과 제2차 성장변혁계획(GTP II)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변혁 이후 정부는 경제 성장 지속에 있어 민간 부문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3개년 중간 계획인 국내경제개혁(Homegrown Economic Reform, HGER)을 수립했다. HGER은 GTP II와 10개년 개발계획(Ten Year Development Plan, TYDP)(2020/21~2029/30)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접근성이 민간 부문 투자를 저해한다. 토지 소유권의 불안정성도 우려 사항이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민간 부문은 비공식 시장 활동과 미흡한 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높은 세율과 열악한 행정 체계가 민간 부문이 겪는 주요 문제이다. 에티오피아경제학회(Ethiopian Economics Association) 정책실무보고서 04/2022에 따르면, 높은 세율, 열악한 세무 행정, 관세 및 무역 규정, 규정의 미흡한 이행 및 집행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와 뇌물은 규정 이행을 더욱 방해하고 열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

2018년 이후 경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부 주요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아비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철도, 산업단지, 호텔, 설타 및 제조업 부문의 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지분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는 에티오피아항공(Ethiopian Airlines), 에티오텔레콤, 에티오피아해운물류서비스공사(Ethiopian Shipping and Logistics Services Enterprise)와 같은 기업의 소규모 지분을 매각할 계획도 있다. 국영 기업의 민영화는 1994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체계는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국영 기업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민영화는 특정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했다. 2020년 6월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선언 제1206-2020호(Public Enterprises Privatization Proclamation No. 1206-2020)를 채택했다. 또한 2018년 8월 총리는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고 총리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에티오피아의 민영화 과정은 국가 목적 달성에 유용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2년 3월 에티오텔레콤의 부분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에티오피아 재무부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개선된 거시경제 상황과 에티오텔레콤의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재무 성과를 수용할 시간을 갖는 것이 관련 모든 당사자, 특히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더 나은 가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



10 | 복지 체제

2020년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간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에티오피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행정 역량의 한계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실향민 급증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확대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2021년 국내실향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는 에티오피아 내 실향 건수를 역대 세계 최고치인 510만 건으로 집계했다. 이는 2013년 당시 시리아의 실향 기록인 350만 건을 상회하는 수치다. 아울러 동부와 남부의 극심한 가뭄은 복지 수요를 가중시켰으며, 2019년 이미 광범위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원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회안전망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생산안전망프로그램(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 고아 및 취약아동 현금지원프로그램(Cash Transfer Program for Orphans and Vulnerable Children, CTP-OVC), 농촌안전망프로그램(Rural Safety Net Program, RSNP), 도시안전망프로그램(Urban Safety Net Program, USNP)이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며, 빈곤과 기아를 줄이고 전반적인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생산안전망프로그램(PSNP)은 만성적으로 식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가구별 소득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도시안전망프로그램(USNP)은 도시 지역의 실업자 또는 불완전 고용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사회안전망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 유엔(United Nations), 세계은행 등 국내외 기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다.

안전망프로그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예산 배정은 2020/21년 121억 에티오피아 비르(ETB)에서 2021/22년 171억 에티오피아 비르로 증가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에티오피아 동부 및 남부 지역의 가뭄 피해자 지원과 국내실향민(IDP) 대응, 그리고 분쟁으로 인한 빈곤 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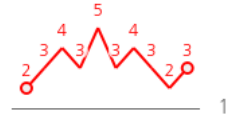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 연방정부 간 분쟁은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행정 역량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2021년 10월 암하라주는 분쟁으로 인하여 예산 집행을 비롯한 통상적인 행정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지속적인 충돌의 결과로 15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지역 내 기반시설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티그라이주는 2020년 9월 이후 모든 정부 구호 및 지원 계획과 조치에서 배제되었다. 연방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에 티그라이주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그 이행은 여전히 보류 중이다.

사회 안전망

3

'06 '24 10



2021/2022년에 에티오피아 연방 예산의 22%가 대외 원조(12.3%)와 대외 차관(10.1%)으로 충당되었다.

국가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16년과 2020/21년 사이에 연간 예산의 평균 61%를 빈곤층 지원 부문에 배정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외 공여기관의 원조를 통해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1월 에티오피아 재무부와 세계은행은 생산안전망프로그램(PSNP) 추진을 위하여 총 7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협정 2건을 체결했다. 이 재원은 1차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에 전용된다. 또한 3억 달러 규모의 무상 원조 협정은 홍수관리프로젝트 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북부 티그라이주에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에티오피아에 대한 8,800만 유로(1억 700만 달러) 상당의 예산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평화 협정 체결과 함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 10억 유로의 개발 원조액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배정액 지급은 인도주의적 접근 개선, 적대 행위 중단,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조건으로 한다.

에티오피아의 민족연방주의 체제는 에티오피아 내 모든 민족 집단의 평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민주적 국가들이 늘 그러하듯, 역대 정권들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족연방 체제를 형성했다. 이는 민족연방주의와 관련된 특권이 다양한 집단에게 확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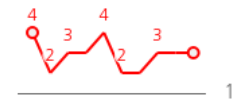
교육 시설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불균등한 분배는 에티오피아 남부와 남동부 지역 주민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야기한다. 지역 차원에서 소수 민족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개인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자주 경험한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는 최근 수년간 악화되었다. 오로미아주, 벤상굴/구무즈주 및 에티오피아 남부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암하라족은 광범위한 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감벨라의 특정 지역에서는 정부군이 오로모족 구성원들을 오로모 해방군(OLA) 반군과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여 초법적으로 처형했다. 지방정부가 소수 민족 주민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거나 가담하고, 동시에 이들 공동체 내 빈곤층의 인도적 요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과 종교는 자주 연결되지만 서로 교차할 수도 있다. 티그라이족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규모 구금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당해왔다.

기회의 평등

3

'06 '24 10



정책을 통해 성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성 불평등은 여전히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자료(2017년)에 따르면 문해율은 남성(51%)이 여성(44.4%)보다 높다. 여아는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낮고 조기에 중퇴할 가능성이 더 높다. 2021년 기준 에티오피아 의회 내 여성 의원의 비율은 41%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당은 남성이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공식 여성 노동 참여율은 46.3%로 1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11 | 경제 성과

지난 2년 반 동안 에티오피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가뭄,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충격에 직면했다. 이러한 도전들은 심각한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9년 8.4%에 도달한 후 2020년(6.1%)과 2021년(5.6%)에 둔화되었다.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GDP의 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지속된 높은 경제 성장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빈곤이 감소했다. 세계은행은 에티오피아의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11년 30%에서 2016년 24%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에티오피아의 1인당 GDP는 2,600달러로, 전년도인 2020년(2,423달러) 대비 증가했다. 다만 1인당 GDP 성장률은 2020년 3.4%에서 2021년 3%로 소폭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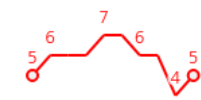
2020년 정부는 2020/21년부터 2029/30년까지 시행될 10개년 개발 계획인 '에티오피아: 번영의 등대(Ethiopia: A Beacon of Prosperity)'를 발표했다. 새로운 계획은 제1차 및 제2차 성장변혁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에서 달성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10개년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네 가지 주요 격차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시경제적 불균형(높은 인플레이션 포함), 실업, 높은 부채 수준, 외환 적자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20.4%에서 2021년 26.7%로 상승했다. 식품 비용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2022년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에티오피아 통계청(Ethiopian Statistics Service)은 일반 인플레이션이 2022년 5월 37.2%, 8월 32.5%, 11월 35.1%, 12월 33.8%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2020년 3.2%에서 2021년 3.7%로 소폭 상승했다. 공공 부채는 GDP의 52.9%에 해당한다. 2021년 에티오피아의 경상수지는 GDP의 -4.1%였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영향을 미친다.

산출 역량

5

'06 '24 10



1

12 | 지속가능성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국가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우선시하며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아비 총리의 개인적 이니셔티브인 '녹색 유산 캠페인(Green Legacy Campaign)'은 삼림 벌채와 토양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녹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4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열 및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촉진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려는 아비 총리의 목표도 재임 기간 동안 진전을 이루었다. 2022년 2월 에티오피아의 대에티오피아 르네상스댐(GERD)이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 또한 2022년에는 에티오피아 리프트밸리에 위치한 툴루 모예(Tulu Moya)와 하와사(Hawassa) 프로젝트 부지가 에티오피아 최초의 지열 발전소 부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0년간 교육 접근성 확대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20년에는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미취학률이 역대 최저인 13%로 떨어졌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전 중 일부는 2021년과 2022년에 퇴보했는데, 분쟁으로 인해 36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시에 기후 현상과 분쟁으로 에티오피아 내 8,700개 학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에티오피아 2학년 학생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1년 13%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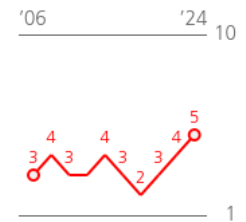
분쟁은 티그라이주 아동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에 따르면 티그라이 전역에서 2,270개 학교가 폐쇄되어 230만 명 이상의 아동(여아 180만 명 포함)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 230만 명의 아동 중 60%는 3년 연속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21년 10월에는 암하라주에서도 150만 명의 학생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아파르주, 벤상굴/구무즈주, 오로미아주의 분쟁 영향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2023년 1월 에티오피아 교육부는 2021/2022학년도 국가 졸업 시험(에티오피아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응시한 학생 중 3.3%만이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은 실망스러운 시험 결과가 교육 부문의 문제를 나타내며 국가 교육의 실제 질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성별 균형 지수(Gender Parity Index)에 따르면 초등교육에서 남성 대비 여성 등록 비율은 0.91이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에 관한 자료는 각각 2015년과 2018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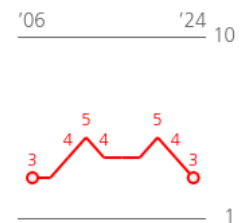
환경 정책

5



교육 정책/연구개발

3



2019년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4.5%로 보고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유엔 교육지수 점수는 0.375(2021년)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2019년 GDP의 0.3%를 연구개발에 지출했다. 이 수치는 약 0.5%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2014년에 설립된 에티오피아 과학기술위원회(Ethiopia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가 연구와 혁신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버넌스

I. 난이도

정치 지도부의 거버넌스 역량은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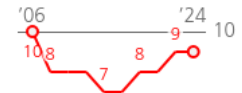
빈곤이 만연하고 인구 증가율이 높으며 기후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내륙국으로, 인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잦은 가뭄, 기반시설 및 전문 인력 부족, 토지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는 2020년 말 이후 4차례 연속 우기 강수량이 부족한 여파로, 지난 40년 중 가장 심각한 엘니뇨 유발 가뭄 중 하나를 겪었다. 그 결과 소말리주, 오로미아주, 남부민족인민주(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 Region), 남서에티오피아인민주(South West Ethiopia People's Region)를 포함한 국가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약 1,190만 명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여러 지역(예: 에티오피아 북부의 아파르주, 암하라주, 티그라이주 및 오로미아주)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 민간인들이 집을 떠나 다양한 국내실향민 캠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무력 충돌은 기반시설을 손상시켜 분쟁 영향 지역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약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분쟁 영향 지역의 정부 관리와 보안군 대부분은 게릴라 전투원의 공격 위협으로 인해 도피했다.

에디르(Edir)와 에큐(Equb) 같은 토착 시민사회 단체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특히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문화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정치 참여 문화는 제한적이다. 민주주의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 이는 현 정부를 포함한 최근 정부들의 지속적인 탄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선거는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했다. 야당과 여당 간의 생방송 텔레비전 토론이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 단체 그룹이 주관했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선거 과정을 참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선거 이후 기간은 폭력과 탄압으로 얼룩졌으며,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야당 정치 지도자와 지지자들이 체포되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시민사회법을 채택하여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활동을 제한했다.

구조적 제약

9



1

시민사회 전통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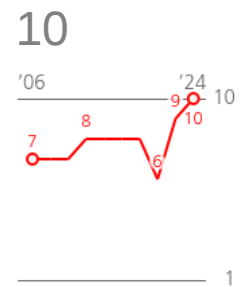
1

2009년의 제한적인 시민사회법이 2019년 3월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며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 환경이 개선되었다. 과거 2009년의 자선단체 및 사회단체 선언‘은 국내외 단체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시민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나, 신규 법안 시행 이후 단체 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시민사회 단체들의 조직적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자원 조달 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해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된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정체성 기반 폭력이 국가의 사회적 자본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국가 내 다양한 민족 집단 간의 신뢰 수준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시민사회 전통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에티오피아의 분쟁 강도는 매우 높다. 근본적인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차이가 내전이나 광범위한 폭력적 분쟁을 촉발한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파르, 암하라, 오로미아, 소말리, 티그라이에서 격렬한 폭력적 분쟁이 관찰되었다. 국가의 정치 환경은 민족성에 기반하며 고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여러 종교적 분쟁이 관찰되었다. 2021년에는 폭력적 분쟁으로 인해 510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대부분 아파르, 암하라, 티그라이 출신). 국내 실향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에 따르면, 이는 2020년 발생한 실향민 수의 3배이며 단일 국가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 연간 수치이다. 2022년에도 민간인들은 무력 충돌로 인해 계속해서 집을 떠났다. 예를 들어, 오로미아주 동웰레가 구역 키레무(Kiremu) 워레다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과 민간인 공격으로 인해 35만 명 이상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민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사한 정체성 기반 폭력이 2021년과 2022년 내내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분쟁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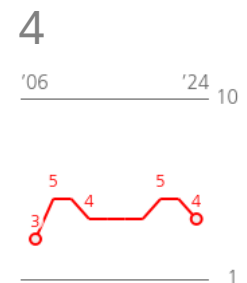
II. 거버넌스 성과

14 | 국정 운영 역량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2018년 취임 당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국정 운영은 정치적 실책으로 촉발된 정세 격변과 내전에 대한 사후 대응에 급급한 양상으로 변모했다. 오로미아의 정치·사회 불안과 티그라이 분쟁,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비 정부는 민족연방주의, 분리독립권, 민족 집단의 자치권, 역사적 부정의 청산 등 에티오피아의 핵심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 점수

우선순위 설정



정치적 공간 개방과 언론 자유를 포함한 에티오피아의 광범위한 개혁은 이후 중단되었다. 대신, 연방정부가 안보 위협과 정치적 격변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분쟁이 발생했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엄격한 통제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재개되었다. 정치적 입장과 인사 임명은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었다.

초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초 설정한 국정 목표의 일부 기초를 유지해 왔다. 독립적인 국가 기구인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Ethiop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규모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느라 역량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또한 오랜 정치적 혼란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환점으로서 국민대화(national dialogue)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정부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대화 과정 또한 기획 및 포용성 측면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국민 대화 과정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론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 대화 과정의 포용성,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이 에티오피아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있어 대화와 위원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위원 지명 및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국가 내 다양한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정당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대화 체제를 확립할 기회가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3년간 국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심각한 가뭄, 티그라이와 오로미아의 반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이러한 위기들로 인해 자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러한 위기 중 일부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나, 많은 위기는 복잡한 정치적 과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역량의 부재에서 비롯된 내부적 문제에 해당한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는 했으나, 정부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의 공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승리는 체제의 존속을 담보함과 동시에, 향후 에티오피아의 영토적 통합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선례를 남겼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티오피아 국방군(Ethiopian National Defense Force)이 분쟁 기간 동안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상당한 전력의 강화가 이뤄져 향후 연방정부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경제 부문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 강화, 경쟁 촉진, 투자 증대를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하는 것을 포함한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러한 개혁은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우선 과제다.

이행

4

'06 '24 10



1

아비 아흐메드 행정부는 국정 운영 면에서 일정 수준 학습 역량을 보여 왔으며, 전반적인 치안 위기 대응 능력이 과거에 비해 고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벤상굴/구무즈 지역 및 콘소(Konso) 구역의 치안 안정화와 더불어 전국 단위 선거가 평화롭게 마무리된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학습을 책임져야 할 평화부(Ministry of Peace)는 국가를 뒤흔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의 위기 대응 조치는 오히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부의 탄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정부는 민족주의 성향의 오로모 정치인들을 축출하고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을 와해시킴으로써 최대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는 인터넷 차단, 대규모 구금, 언론 탄압 및 선전 등 이전 정권이 사용했던 통제 수단들을 그대로 답습했다.

에티오피아의 여러 국가 기관들은 개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연방민족반부패위원회(Federal Ethnic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가 부패 척결에 나서 수많은 관련자를 체포한 사례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가계획위원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또한 개발 계획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국가가 더 나은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역량을 갖추고 있다.

15 | 자원 효율성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은 집권당과의 정치적 관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2021년 총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당시, 보건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사 임명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채용 과정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공무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일부 존재한다. 다만, 여전히 정치적 배경이나 개인적 연고에 기반한 채용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감사원(Office of the Federal Auditor-General)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관은 예산 집행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연방감사원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FDRE)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감사원장은 총리의 추천을 거쳐 하원에서 임명된다. 지난 몇 년간 연방감사원은 정부 기관 내의 예산 횡령 및 낭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점차 독립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 감사원장은 기관 및 공무원과의 협력 부족을 포함하여 감사 과정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강조한 바 있다.

정책 학습

3

'06 '24 10



자산의 효율적 활용

4

'06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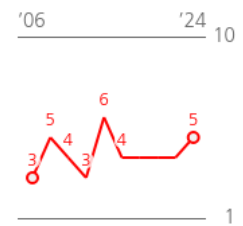
연방감사원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관 중 예산 횡령과 낭비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국립대학교와 국세청 지부이며, 외교부와 관세위원회 또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2022년 6월, 연방감사원은 2021/2022 회계연도 동안 총 24개 기관이 예산 초과 지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감사원은 이러한 예산 과다 지출 및 낭비의 원인으로 회계 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조달 규정 미준수 등 여러 요인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들은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나 사법 처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정책 수립은 집권당의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이 고도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비교하기보다, 집권당이 미리 설정한 목표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집권당의 슬로건이자 전반적인 목표는 ‘변영’이며, 이에 따라 모든 정책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결국 정책 설계 과정 대부분을 집권당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2021년 신임 내각 출범 이후, 각 부처는 100일 계획을 제출하고 매 주기가 끝날 때마다 총리와 내각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의 이행 실적과 성과는 기획개발부(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가 점검 및 평가한다. 다만, 지방 정부가 각 행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책 집행을 평가하고 감시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며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를 하달받아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 간의 이해관계와 기능은 서로 중복되거나 얹혀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부패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는 후견주의, 권력층의 약탈적 정치, 지대 추구, 그리고 국가 포획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부패법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패는 국민의 전반적인 복지와 국가 경제에 심각하고 다각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8년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부패 관행을 폭로하는 적극적인 언론의 부재와 부패 근절에 있어 비효율적인 정부 기관의 대응이 국가의 정치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패 척결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정부는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 포고령(포고령 제1236/2021호)을 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부패를 통제할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나 연방감사원(Federal Auditor-General)과 같은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부패한 고위 관리를 사법 처리할 실질적인 권한은 결여되어 있다. 고위 관리들에 대한 기소는 부패 처벌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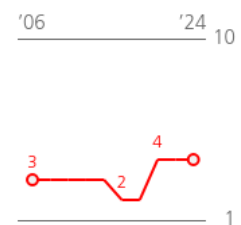
정책 조정

5



반부패 정책

4



2021년 9월,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의 자산신고등록국장은 아파르와 소말리 지역을 제외한 약 150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관리들이 자산을 등록했으나, 4,400여 명은 신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장에 따르면, “신고 내용 중 최소 47%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립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년 12월, 해당 위원회는 부패 및 조직적 절도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혐의 적용 대상에는 토지 행정 및 정부 주택 관리, 치안 및 사법, 금융 부문, 국세 및 관세 담당 고위직은 물론, 에티오피아 금융보안국(Financial Security Services) 국장까지 포함되었다. 아디스아바바 행정부 내의 여러 공직자 또한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2023년 1월, 당국은 대중으로부터 127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현재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들은 긍정적인 출발로 평가받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직적 부패를 완전히 해결하고 통제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16 | 합의 형성

에티오피아의 다민족적 특성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은 현 번영당을 포함하여 지난 세 정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치적·경제적 쟁점이었다. 에티오피아는 민족 연방주의를 매우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헌법은 주 내 다수 민족 및 토착 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의 행정 및 통제권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해당 지역 다수 민족 대표에게 우선권을 보장한다.

에티오피아가 여러 민족 단위의 국가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국가의 영토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민족 대표들의 자치권 확대 요구를 억제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아비 아흐메드 총리에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균형 문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아비 총리는 범에티오피아 집단들로부터 오로모(Oromo) 민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민족주의적 의제를 추진한다고 비난받는 동시에, 오로모 자치권을 옹호하는 측으로부터는 오히려 그가 반오로모적 의제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오로모와 암하라주 모두에서 청년 운동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했으나, 역설적으로 현재는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린 바로 그 세력들로부터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을 무력화함으로써 반민주적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번영당 내 오로모 세력과 암하라 세력 간 지속되는 권력 투쟁은 여전히 결론 나지 않았으며, 이는 에티오피아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목표에 대한 합의

4

'06 '24 10



1

암하라 정치인들이 범에티오피아적 국가 정체성을 지향하는 반면, 아비 아흐메드 정부 내 오로모 정치인들은 민족주의 강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대립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공공건물 내 오로모어 및 오로모 깃발 사용을 강제하는 정부의 조치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에티오피아 경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합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연방정부의 지침은 시장 개입을 통해 얻는 이익을 유지하려는 하위 행정 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정치적 참여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했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집권 후반기의 '발전국가' 모델의 잔재로 인해,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역시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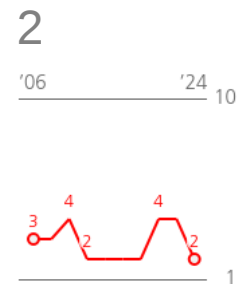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의 모든 정치 세력은 국가 지도자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앙 정권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정치 집단들의 자치권 확대 요구를 억제해야만 한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중앙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범에티오피아주의를 지향하며 독단적인 통치 성향을 더욱 극대화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에티오피아의 존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2021년 총선에서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야당 인사들을 소외시킨 사례에서 드러난다. 현재 야당과 민주 개혁가,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가선거위원회(NEBE)와 같은 민주적 기관들은 집권 번영당과 대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헌법 개혁을 통해 구축하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민국가 체제하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국내 친민족연방주의 정당들과 같은 우려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한편, 에티오피아 사회정의시민당(EZEMA)과 같이 민족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친민주주의 정당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오로미아와 암하라주에서 심각한 탄압을 받아, 실질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아비 아흐메드 총리 집권 이후, 정치 파벌 간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으며, 사회적 분열은 소수 민족 박해와 종교적 충돌을 포함한 폭력 사태로 분출되었다. 집권 번영당은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고질적인 파벌 갈등으로 인해 분열을 더욱 부추겼다.

2019년 이후 에티오피아 사회 내 민족 간의 위험한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에티오피아 북부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분쟁은 초기에는 연방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간의 대립이었으나, 이후 모든 티그라이 민족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교전 지역이 암하라주로 확대되면서 암하라 민족까지 연루된 민족 간 분쟁으로 격화되었다.

반민주적 행위자



군열/분쟁 관리



오로미아주에서는 암하라 민족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 사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지 관리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는다. 집권당 내 암하라와 오로모 분파 간의 긴장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균열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테와헤도 교회(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와 이슬람 평의회 마즐리스(Majlis)와 같은 유사 깊은 종교 기관들마저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갈등이 극단적 충돌로 번지기 전, 양극화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전담하는 기구는 에티오피아 국가대화위원회(Ethiopian National Dialogue Commission)로, 기존의 행정경계 및 정체성 문제 위원회(Administrative Boundary and Identity Issues Commission)와 화해위원회(Reconciliation Commission)의 업무를 이어받았다. 이 두 위원회의 위원들은 저명한 인사, 종교 지도자 및 야당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경계 및 정체성 문제 위원회(Administrative Boundary and Identity Issues Commission)의 주된 목적은 행정 경계에 대한 분쟁과 정체성 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반면, 화해위원회(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에티오피아 국민 간의 평화, 정의, 국가적 통합과 합의를 유지하고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원들의 잇따른 투옥, 지속되는 분쟁, 합의 도출 실패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해당 위원회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그 역할은 에티오피아 국가대화위원회(Ethiopian National Dialogue Commission)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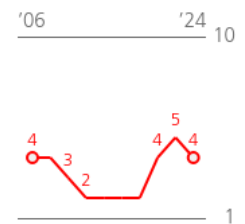
해당 위원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활동 내역을 상세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다수 야당은 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에티오피아 내 50여 개 이상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체인 에티오피아 정당연합협의회(Ethiopian Political Parties Joint Council, EPPJC)는 성명을 통해, 위원 선출 과정의 포용성과 신뢰성 결여를 지적하며 하원 위원 선출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정당연합협의회(EPPJC) 소속 40개 정당은 향후 개최되는 국민대화에 참여하기로 투표했다.

국민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현재 이 국가의 역사는 여러 정치 세력이 청년층의 대중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정치적 거부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에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 다양한 오로모 야당 정당들, 그리고 현재 연방정부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력 등 광범위한 범위의 친연방주의, 민족주의 세력 구성원들이 포함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난 2년간 티그라이, 아파르, 암하라 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중 무장 세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대 사례를 포괄적으로 기록할 역량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의자를 처벌하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 다만,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EHRC)는 자체 역량 내에서 인권 증진 및 보호라는 목표를 견지해 왔으며, 이는 긍정적인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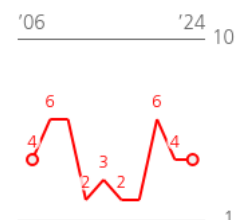
공공 협의

4



화해

4



17 | 국제 협력

현 정부의 전략은 에티오피아의 번영을 추구하는 집권당의 비전에 따라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제조업과 강력한 민간 부문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에티오피아를 중하위 소득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10개년 개발 계획(2020/21 – 2029/30)'을 수립했다. 이처럼 정부는 명확한 정치 및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연합(EU),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엔(UN),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영국 국제개발부(DIFID),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 보조금 및 투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유럽연합(EU)은 티그라이주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8,800만 유로(약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에티오피아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2021년 11월에는 미국이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대상국 명단에서 에티오피아를 제외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던 에티오피아의 섬유 산업에 타격을 입혔으며, 그 여파로 섬유 공장의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중하위 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던 정부의 경제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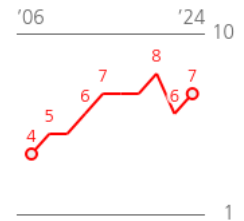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대상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정부는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협정들을 체결하며, 아프리카연합(AU),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럽연합(EU) 등이 작성한 주요 국제 협약 대부분에 서명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는 거의 모든 국제적·지역적 조약을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 대한 준수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특히 인권 및 민주적 권리와 관련된 조약에서 더욱 그러하다.

2018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던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국경 전쟁을 끝낸 알제 협정(Algiers Agreement)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알제 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국경 위원회(Eritrea-Ethiopia Boundary Commission)는 분쟁지인 바드메(Badme)를 에리트레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그간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바드메를 비롯해 에리트레아 귀속으로 결정된 기타 지역들을 계속해서 통제해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북부 분쟁에 있어서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관계가 취약한 상태이다. 일례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1년 12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UNHRC)가 설립한 국제인권전문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Human Rights Experts)와의 협력을 거부했다. 분쟁 해결을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TPLF)은 2022년 11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영구적 적대행위 종단을 통한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재, 양측은 평화 협정에 따라 다양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상 요구를 묵살해 왔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에티오피아 정부에 약속했던 정치적 지지나 경제적 원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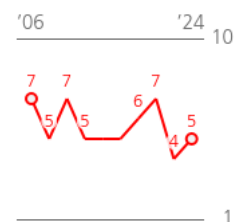
지원의 효과적 활용

7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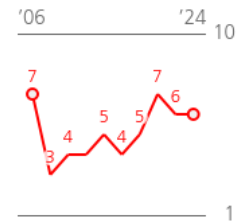
5



에티오피아의 정치 지도부는 다수의 인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제기구의 규정을 준수한다. 에티오피아는 1996년 설립된 정부간개발기구(IGAD)의 창립 회원국이며, 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및 동아프리카 대기군(Eastern Africa Standby Force, EASF)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나아가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8년 아비 총리 정부는 2000년 체결된 알제 협정을 수용하며 에리트레아와 평화 관계를 구축했다. 같은 해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지도자들은 양국을 오가며 회담을 가졌다. 또한 아비 총리는 2019년 수단 내 군부와 시위대 세력인 '자유변화세력(Forces for Freedom and Change, FFC)' 사이의 과도기 협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아비 총리는 카르툼(Khartoum)을 직접 방문하여 양측을 만났으며, 마흐무드 디리르(Mahmoud Dirir) 대사가 이끄는 특사를 파견해 중재 과정을 대리하게 했다. 아비 총리는 민간인 8명과 군 장교 7명으로 구성된 15인 규모의 과도위원회를 제안하여 수단을 민주주의로 이끌도록 했다. 에티오피아는 인접국들과 무역, 전력, 안보 및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대에티오피아르네상스댐(GERD) 프로젝트는 인근 국가들에 저렴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현재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정부 간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지역 협력

6



전략적 전망

에티오피아는 더욱 개방적인 정치·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 분투하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의 분쟁 해결은 국가가 마침내 장기간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앞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무력 분쟁의 격화: 국가 전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발하여 수백만 명의 민간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소규모 지역 공동체 간의 분쟁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취약한 제도: 에티오피아의 국가 기관들은 매우 취약하며,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 또한 정부 기관이 자신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자의적 무력이 그 대안으로 선택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 청산 및 화해 측면에서의 결함: 그동안 추진해 온 과거사 청산과 사회적 화해 방안들은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 못했고, 내용이 포괄적이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열릴 국민대화에서 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만연한 부패와 정실주의: 부패와 정실주의는 국가 전반에 깊게 뿌리 박힌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정부 기관 내에서 뇌물 수수는 일상화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패 공직자들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안보 우려: 국가 내 많은 지역에서 치안 부대가 무력화되었거나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 사건 보고가 접수되어도 대응에 수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이 소요되기도 하며, 연방정부는 공공 도로와 국유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난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에티오피아 경제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향한 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